

철도노조 '준법투쟁' 열흘만에 중단

지난달 24일부터 '철도 쪼개기'에 반발 투쟁 총파업에 집중하기 위해 준법투쟁 유보 관측 쟁의행위 투표 결과 1만2768표 찬성...총파업 국토부, 대체 기관사 투입위해 교육 실시 중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일 오후부터 준법투쟁을 중단했다. 지난달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철도노조는 노조원 64%가 총파업에 찬성하면서, 총파업에 집중하기 위해 준법투쟁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일 철도노조와 철도운영사들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일 오후부터 준법투쟁을 중단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고속열차(SRT) 노선 확대 및 부산발 KTX를 증편하면서 노조는 이를 '철도 쪼개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지난 1일부터 부산~수서를 운행하는 SRT 고속

열차의 운행을 11% 이상(일일 4100여석)을 축소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정부가 해당 구간의 운행을 축소할 SRT 열차를 이달 운영을 확대한 전라선과 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하는 등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만2768표(64.4%)로 이달 총파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가 이달 중순 총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추석연휴 귀성객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했던 준법투

쟁을 잠정 유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총파업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열흘 만에 준법투쟁을 유보한 것은 총파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총파업 시기를 이르면 이달 14일 추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총파업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 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 기관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 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사를 투입할 경우 신체, 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코레일 운영 수도권 광역전철)에 대한 실무수습 훈련 400시간 또는 6000km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철도노조 측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통보된 사항이 없다"며 "파업시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대체 기관사의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동부소방, 현장대응능력 강화 위한 훈련지도관제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는 최근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지도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여수해경, 사고 취약선박 선제적 해양오염 예방 활동 실시

여수해양경찰서는 "항-포구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기계류 선박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와 함께 선저폐수 약 7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경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순찰 활동 전개

고흥경찰서는 최근 2학기를 맞이하여 학생의 하교시간에 맞춰 고흥군청,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순찰 활동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장흥경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장흥경찰서는 최근 장흥군 경남진도서관 등 장흥군 일원에서 '23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순천경찰, 특별치안활동 위한 민·관·경 합동 야간순찰 실시

순천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순천역과 조곡동 봉화산 둘레길을 통해 범죄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진도경찰, '진도사랑 아이사랑' MOU 추진

진도경찰서는 최근 진도군청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 아동 발굴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진도사랑 아이사랑'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외국인 개인정보 빼내 불법 유심 개통...범죄조직에 판매 50대 구속

유심칩 1561개, 범죄조직에 팔아

빼돌린 외국인 개인정보로 불법 유심을 개통·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유심을 개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공범 B(42)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동안 불법 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유심 1561개 유통·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전·경기도 지역에서 '깡 투자'로 사들인 주

택 두 채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인 여권 사진파일 사본을 입수한 이들은 별정통신사(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에서 대표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정보 인증 절차를 여권 사본으로도 가능, 비교적 허술한 별정통신사를 통해 대표유심을 개통했다.
A씨는 B씨에게 개통한 불법 유심칩을 개당 5만 6000원에 팔았고, B씨는 불법 유심칩을 범죄 조직단에 개당 15만~20만 원에 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불법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단 범죄에 악용돼 관련 피해액만 11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돈을 유희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개월 간 추적 끝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의 경우 유심 개통 과정이 비교적 허술하고, 범죄에 악용될 경우 정지도 어려워 관련 법 강제가 시급하다"며 "불법 유심칩 유통은 여러 범죄에 악용돼 큰 피해를 양산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육군의 높은 힘', 비행하는 아파치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전술비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검찰 "이재명 대표 2회 연속 불출석 유감, 절차에 응하라"

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을 대복송금 의혹 관련 조사가 무산되자 검찰이 즉각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가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와 검찰은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일 오전 이 대표 측은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고, 이 대표 측은 다시 '4일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두고 "검찰이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도 검찰이 이 대표에게 8월30일 대복송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다음 주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내일(8월24일) 가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 상황을 고려한 일정으로 예정대로 조사하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이 대표가 예정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자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슬비기자